

독서

목차

이유 추리 문제 이론 4

이유 추리 문제 적용 24

전개 방식 문제 이론

전개 방식 문제 적용

표 그림 그래프 문제 이론

표 그림 그래프 문제 적용

줄글 보기 문제 이론

줄글 보기 문제 적용

일치 문제 이론

일치 문제 적용

어휘 문제 이론

어휘 문제 적용

풀이순서 0단계

풀이순서 1단계

풀이순서 2단계

‘글’(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10하원칙 6WH2CR					
지문 표시 요소 = 중심 내용 파악 요소 = 출제 요소				선택지 오진술 구성 원리 기본 : 단순 불일치 (10하)요소 바꾸기 요소 간 관계 바꾸기	
주체	≡ 상 황	Who	누가	주로 주어(A가, A는), A의 ~	주체 바꾸기
대상 (상대)		What	무엇을	주로 목적어(A를), 주어(A란), 부사어(A에 대해), 개념, 상대	대상 바꾸기 (주체와 대상의 방향 바꾸기)
시간		When	언제	배경(변화할 때 주의)	시간 바꾸기, 선후 바꾸기
공간		Where	어디서	배경(변화할 때 주의)	공간 바꾸기
원인 (과거)		Why	왜	~이므로, ~때문에	인과 바꾸기
목적 (미래)		Why	왜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자	목적 바꾸기
수단, 방법		How	어떻게	~를 통해, ~함으로써	수단 바꾸기, 목적과 수단 바꾸기
조건		Condition		A의 경우, A라면, A라 하더라도	조건 바꾸기
기준		Criterion		A에 따라	기준 바꾸기
관계		Relation		- 비유·유추 관계 - 상하(포함) 관계 - 양자 관계(A는 B보다 크다) - 삼자 관계(A와 B는 반비례, A와 C는 비례)	관계 바꾸기 - 문장 구조 관계 바꾸기 : 지문이나 보기에서 (A 는) (B와 C를) 선지에서 (A와 B는) (C를) - 비교의 자리 바꾸기 - 선후 관계를 인과 관계로 바꾸기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문제 해결을 위한 10하 원칙(6WH, 2CR)

선택지 구성의 원리

선택지는 지금까지 공부한 지문 표시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만 하고 ‘발문의 유형’에서 문제 풀 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여주겠다.

1. 주체 바꾸기 : 독서뿐 아니라 고전소설 특, 인물 문제로 많이 나온다.
2. 대상(상대, 객체) 바꾸기 : 유사 개념어가 연달아 나올 때 주의해야 한다.(주체와 대상 바꾸기, 방향 바꾸기)
3. 선후 바꾸기 : 고전소설 특, 사건의 선후 관련 줄거리 문제로 많이 나온다.
4. 공간 바꾸기 : 고전소설, 생명 과학, 기술 특. 어떤 공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출제 요소
5. 인과 바꾸기 : 독서, 문학, 화작, 언매 전 영역에서 단골 출제.
6. 목적 바꾸기, 수단 바꾸기, 목적과 수단 바꾸기
7. 조건 바꾸기
8. 기준 바꾸기
9. 관계 바꾸기 : 지문에서 비교하지 않았는데 선택지에서 비교하기, 비교의 자리 바꾸기, (지문/보기에서)선후관계를 (선택지에서)인과관계로 바꾸는 오류 등
10. 단순 불일치 : 원리라기보다는 국어 문제의 절반 이상은 이 방식으로 오답을 구성한다. 주로 서술부와 관련된다.
(지문/보기에서) ‘A는 B이다’ -> (선택지에서) ‘A는 B가 아니다’
(지문/보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선택지에서) ‘언급하기’
‘A는 B이다’ -> ‘A는 C이다’
(지문/보기에서) AB 단순 병렬관계를 -> (선택지에서) $A > B$ 비교평가하기

이유 추리 문제

㉠ 밑줄 친 '이유' 추리 문제 단계적 해법

이유 추리 문제(추론의 탈을 쓴 일치형 문제) 풀이 공식

이유 추리 문제의 답은 다음 세 가지 수준에서 결정된다.

1. ㉠바로 앞에 답이 있거나
2. ㉠에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묻고 있다면, 바로 뒤에 답이 있다.
3. 앞뒤에 답이 없으면, 답을 찾을 범위를 더 확장해 보아야 한다. ★
 - (1) 해당 문단의 주제 의식을 담은 (해당 문단의 첫 문장을) 보거나
 - (2) 지문 전체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첫 문단을 참조하면, ㉠이 어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실마리가 풀린다.
 - (3) 무엇을 하기 위한 기술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의 경우, (1문단에) 그 목적이 제시된다. 이것이 본문에 제시된 어떤 기능 ㉠의 이유에 대한 답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1문단에 제시된 '목적'에 (지문 읽을 때) 미리 표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 문제 유형을 풀 때 흔히 하는 가장 커다란 착각은 써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써 있지 않은 내용을 '추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추리'문제는 지문에서 확실하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치 문제'처럼 풀어야 한다.

'이유 추리 문제'를 문장 차원, 문단 차원, 글 전체 차원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연습해 보자.

1단계. ㉠ 앞에 '이유'가 위치해 있을 때(문장 차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1년 10월 시행)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보면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게가 모여 있으면 경쟁이 치열해져 상품의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게들이 모여 있으면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어 오히려 이익이다. (그렇다면 모여 있는 가게가) 단독으로 있는 가게보다 어떻게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일까? 항상 논의 대상이나 주제는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다면' 뒤에는 본격적인 '논의 대상'이 나오고, '그런데' 뒤에는 '문제상황'이 제시된다. 이 경우 2문단 이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을 다루게 된다.

상품에 대한 정보 없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입하려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비용을 들여 정보를 탐색하고, 이 정보를 통해 편익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편익이란 탐색 행위를 통해 같은 상품을싼 가격에 사거나, 같은 값에 질이 더 좋은 상품을 구입하여 얻은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적정량의 정보 탐색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살 때, 1만 원의 비용으로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해서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3만 원 싸게 구입했다고 하자. 소비자는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하여 2만 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컴퓨터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던 소비자가 정보를 처음 얻게 되었으므로 이때의 이익은 크다. 그런데 이 소비자가 또 1단위의 정보를 추가로 탐색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 왜냐하면 정보를 더 얻을수록 상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므로 현재 정보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 드는 탐색 비용은 더 늘어나는 데 반해, 그에 따르는 추가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정보를 탐색할 때 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가하고 절약하는 돈은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 이상의 정보 탐색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 탐색을 계속하면 한계 편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② 정보 탐색을 계속하면 한계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③ 정보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정보를 추가 탐색하면 정보 과잉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⑤ 정보 추가를 위한 비용이 추가 정보로 얻는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살 때, 1만 원의 비용으로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해서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3만 원 싸게 구입했다고 하자. 소비자는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하여 2만 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컴퓨터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던 소비자가 정보를 처음 얻게 되었으므로 이때의 이익은 크다. 그런데 이 소비자가 또 1단위의 정보를 추가로 탐색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 왜냐하면 정보를 더 얻을수록 상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므로 현재 정보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 드는 탐색 비용은 더 늘어나는 데 반해, 그에 따르는 추가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정보를 탐색할 때 (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가하고 (절약하는 돈은)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 이상의 정보 탐색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 탐색을 계속하면 한계 편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② 정보 탐색을 계속하면 한계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③ 정보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정보를 추가 탐색하면 정보 과잉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⑤ 정보 추가를 위한 비용이 추가 정보로 얻는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주어) 서술어 중심으로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을 강추!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살 때, 1만 원의 비용으로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해서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3만 원 싸게 구입했다고 하자. 소비자는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하여 2만 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컴퓨터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던 소비자가 정보를 처음 얻게 되었으므로 이때의 이익은 크다. 그런데 이 소비자가 또 1단위의 정보를 추가로 탐색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 왜냐하면 정보를 더 얻을수록 상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므로 현재 정보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 드는 (탐색 비용은) 더 늘어나는 데 반해, 그에 따르는 (추가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정보를 탐색할 때 (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가하고 (절약하는 돈은)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 이상의 정보 탐색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 ⑤ 정보 추가를 위한 (비용이) 추가 정보로 얻는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2단계. ㉠ 뒤에 ‘이유’가 위치해 있을 때(문단 차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학년도 수능)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②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③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 ④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일단, 밑줄 친 부분을 읽었을 때, 이유는 뒤에 제시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문장에는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래야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택지에서 ①, ②번은 탈락이다.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조건 X**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②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조건 X** 기차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③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조건**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 ④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조건**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주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 기차를 탔을 때의 두 가지 가능세계를 제시한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기차를 탔’는 데도 ‘여전히 지각’을 하는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세계. ‘기차를 탔’기 때문에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가능세계.

조건	가능세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1) 여전히 지각하는 세계
	2) 지각하지 않는 세계

Tip 이 지문과 선택지 진술에 해야 하는 표시 : 주어/ 서술어/ 대상/ 조건

가능세계를 통한 답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㉓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이 두 가지 가능한 세계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㉓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조건 추리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주어가 바뀌었다.
본문의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가
선택지에서는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로.

그렇다면 서술어도 바뀌어야 한다.
본문의 '우리의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가
선택지에서는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로.

3단계. 앞에도 뒤에도 없다면? 여기에 있다!(문단 차원, 전체 글 차원)

(1) 해당 문단의 첫 문장으로 좀 더 확장해 보라(문단 구성의 원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3년 4월 시행 지문) 2025학년도 수능 특강에서 다시 등장한 경제 게임 이론 지문

경제 분야의 게임이론이란 상호의존적 상황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 결과를 밝히는 모형을 말한다. 특정 제품에 대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복점기업의 경우, 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 의존적 상황이 된다. 복점기업의 게임은 의사결정이 동시적이냐, 순차적이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점기업의 게임 상황을 보자. 게임에서 얻는 이득을 보수라 하는데, <표>는 두 기업이 각각 얻게 될 보수를 나타낸 것이다. A사와 B사는 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고가전략과 저가전략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A사가 고가전략

구 분		B사	
		고가전략	저가전략
A사	고가전략	(8억, 8억)	(1억, 10억)
	저가전략	(10억, 1억)	(4억, 4억)

(괄호 왼쪽은 A사, 오른쪽은 B사의 보수를 나타냄.)

을 선택할 경우 B사는 고가전략에서 8억, 저가전략에서 10억의 보수를 얻게 되므로 저가전략이 유리하다. A사가 저가전략을 선택할 경우에도 B사는 저가전략이 유리하다. A사 역시 B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가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처럼 상대방의 전략 선택 여하에 관계없이 각 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우월전략이라 한다. 얼핏 보면 8억씩의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고가전략이 우월전략처럼 보이지만 ㉠ 상대의 전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두 기업은 저가전략에

서 우월전략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기업은 최대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A사와 B사는 우월전략 균형 상태에서 4억씩의 보수를 얻기보다는 고가전략으로 담합함으로써 8억씩의 보수를 얻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두 기업이 현재 모두 8억씩의 보수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담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A사가 담합을 깨고 저가전략을 선택하면 일시적으로는 10억의 보수를 얻을 수 있지만, B사도 곧바로 저가전략으로 선회할 것이므로, 이후로는 두 기업 모두 4억의 보수를 얻게 된다. 따라서 담합에서 이탈하는 것보다 담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한편 복점기업 중 한 기업이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반응하여 다른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순차게임이라 한다. 순차게임에서 기업은 의사결정 순서와 예상 결과를 나타낸 '의사결정나무'의 분석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도 있다. 가령, A사가 특정 지역에 매장을 개장하기로 먼저 결정하고 이어서 B사도 같은 지역에 진입하려 한다고 하자. 이때 A사는 대형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와 소형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률을 분석하여 매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A사의 선택 여하에 따라 B사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사결정나무'의 분석을 통해 A사는 B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최대의 이윤을 얻는 매장 규모를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경쟁 관계의 복점기업들은 상호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 생산량, 시장 진입 등을 결정할 때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1. ㉠의 이유를 쓰시오.

(상대의 전략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의 앞에서도 뒤에서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해당 문단의 맨 앞을 보자.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점기업의 게임 상황을) 보자. 게임에서 얻는 이득을 보수라 하는데, <표>는 두 기업이 각각 얻게 될 보수를 나타낸 것이다. A사와 B사는 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고가전략과 저가전략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A사가 고가전략을 선택할 경우 B사는 고가전략에서 8억, 저가전략에서 10억의 보수를 얻게 되므로 저가전략이 유리하다. A사가 저가전략을 선택할 경우에도 B사는 저가전략이 유리하다. A사 역시 B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가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처럼 상대방의 전략 선택 여하에 관계없이 각 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우월전략이라 한다. 얼핏 보면 8억씩의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고가전략이 우월전략처럼 보이지만 ㉠ 상대의 전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두 기업은 저가전략에서 우월전략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 문단의 중심 내용(주제)은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임 상황)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의 전략'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1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1문단 끝문장은 대개 지문 전체를 지배하는데, 여기에 '무엇'에 대해,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밝히기 때문이다. 1문단 끝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동시적 의사 결정 게임)과 (순차적 의사 결정 게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소개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경제 분야의 게임이론이란 상호의존적 상황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 결과를 밝히는 모형을 말한다. 특정 제품에 대해 시장이 양분하고 있는 복점기업의 경우, 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 의존적 상황이 된다. 복점기업의 (게임은 의사결정이 동시적이냐, (순차적이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2문단 첫 문장에서 이것(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점기업의 게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의 이유가 된다. 동시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게임이므로 상대의 전략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앞뒤 문장에 '이유'가 없을 때는 생각해 보아야 할 영역을 확장해 보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글의 구조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글의 '구조'나 '문단 주제', '전체 주제' 속에서 찾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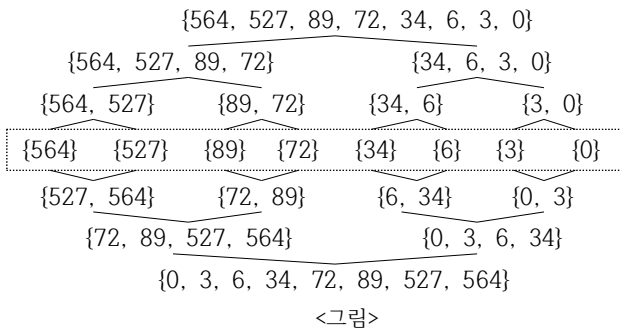
(2) 확장 - 전체 '주제' + 해당 문단 속에서 찾으면 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년 10월 시행) 수업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 지문은 과제로 내도 무방해요

알고리즘은 컴퓨터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문제 해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진다.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할 때 흔히 시간 복잡도를 사용하는데, 시간 복잡도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연산의 횟수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이때 연산에는 산술 연산뿐만 아니라 원소 간의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연산도 포함된다. 알고리즘 분야 중 정렬은 원소들을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과 같이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으로, 정렬을 통해 특정 원소를 탐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삽입 정렬은 정렬된 부분에 정렬할 원소의 위치를 찾아 삽입하는 방식이다.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경우, 먼저 564를 정렬된 부분으로 가정하고 그다음 원소인 527을 564와 비교하여 527을 564의 앞으로 삽입한다. 그리고 그다음 원소인 89를 정렬된 부분인 {527, 564} 중 564와 비교하여 564의 앞으로 삽입하고, 다시 527과 비교하여 527의 앞으로 삽입한다. 정렬된 부분과 정렬할 원소를 비교하여, 삽입할 필요가 없다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다. 삽입 정렬은 원소들을 비교하여 삽입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비교 연산의 횟수를 구하여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시간 복잡도는 28번(1+2 +3+4+5+6+7)이 된다.

병합 정렬은 정렬하려는 집합을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반복 분할한 뒤 다시 병합하면서 하나의 정렬된 집합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집합을 이루는 원소의 개수가 적을수록 정렬에 필요한 연산 횟수가 줄어든다.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병합 정렬을 사용하는 경우, ㉠ <그림>의 ㉠과 같이 8개의 부분 집합이 될 때까지 전체 집합을 분할한다.



그 후 {564}와 {527}을 비교하여 {527, 564}로 병합하고, {89}와 {72}를 비교하여 {72, 89}로 병합한다. {527, 564}를 {72, 89}와 병합할 때에는 527과 72를 비교하고, 527과 89를 비교하여 {72, 89, 527, 564}로 병합한다. 병합 정렬은 원소들을 비교하여 정렬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비교 연산의 횟수를 구하여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간 복잡도는 12번((1+1+1)+(2+2)+4)이 되고 삽입 정렬에 비해 시간 복잡도가 감소한다.

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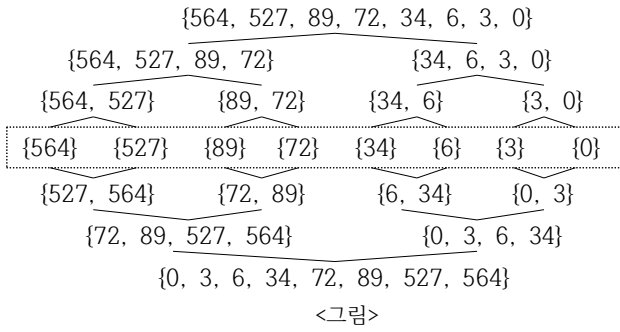
- ① 전체 집합을 정렬하는 것보다 부분 집합을 정렬하는 것이 연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 ② 부분 집합의 원소들 중 자릿수가 큰 원소일수록 비교 연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 ③ 부분 집합 원소들의 초기 나열 상태에 따라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 ④ 전체 집합을 반복적으로 분할할수록 비교 연산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 ⑤ 전체 집합을 각각의 부분 집합으로 다시 분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년 10월 시행)

알고리즘은 컴퓨터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문제 해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진다.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할 때 흔히 시간 복잡도를 사용하는데, 시간 복잡도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연산의 횟수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이때 연산에는 산술 연산뿐만 아니라 원소 간의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연산도 포함된다. 알고리즘 분야 중 (정렬은) 원소들을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과 같이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으로, 정렬을 통해 (특정 원소를 탐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삽입 정렬은) 정렬된 부분에 정렬할 원소의 위치를 찾아 삽입하는 방식이다.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경우, 먼저 564를 정렬된 부분으로 가정하고 그다음 원소인 527을 564와 비교하여 527을 564의 앞으로 삽입한다. 그리고 그다음 원소인 89를 정렬된 부분인 {527, 564} 중 564와 비교하여 564의 앞으로 삽입하고, 다시 527과 비교하여 527의 앞으로 삽입한다. 정렬된 부분과 정렬할 원소를 비교하여, 삽입할 필요가 없다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다. 삽입 정렬은 원소들을 비교하여 삽입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비교 연산의 횟수를 구하여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시간 복잡도는 28번(1+2+3+4+5+6+7)이 된다.

(병합 정렬은) (정렬하려는 집합을)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반복 분할한 뒤) 다시 병합하면서 하나의 정렬된 집합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집합을 이루는 원소의 개수가 적을수록 정렬에 필요한 연산 횟수가 줄어든다.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병합 정렬을 사용하는 경우, ㉠ <그림>의 ㉠과 같이 8개의 부분 집합이 될 때까지 전체 집합을 분할한다.



(그 후) {564}와 {527}을 비교하여 {527, 564}로 병합하고, {89}와 {72}를 비교하여 {72, 89}로 병합한다. {527, 564}를 {72, 89}와 병합할 때에는 527과 72를 비교하고, ㉠ 527과 89를 비교하여 {72, 89, 527, 564}로 병합한다. 병합 정렬은 원소들을 비교하여 정렬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비교 연산의 횟수를 구하여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간 복잡도는 12번((1+1+1+1)+(2+2)+4)이 되고 삽입 정렬에 비해 시간 복잡도가 감소한다.

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체 집합을 정렬하는 것보다) (부분 집합을 정렬하는 것이) 연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 ② 부분 집합의 원소들 중 자릿수가 큰 원소일수록 비교 연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 ③ 부분 집합 원소들의 초기 나열 상태에 따라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 ④ 전체 집합을 반복적으로 분할할수록 비교 연산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 ⑤ 전체 집합을 각각의 부분 집합으로 다시 분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체 주제와 연결해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가? 답은 1번이다. 1문단 끝부분은 지문 전체를 지배한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연산 횟수가 줄어든다 = 시간 복잡도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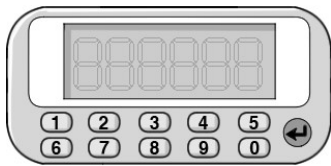
(3) 1문단에 제시한 목적(~하기 위해서/~하려고/~하고자)(글 전체 차원)

1문단에는 글 전체의 '목적'이 제시된다. 가령 어떤 '사회제도'를 설명하거나 '기술'을 소개하려고 할 때, 그 제도의 도입 목적이나, 그 기술을 개발한 목적이 언급된다. 그것은 대부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년 3월 시행 지문)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인증은 필수적이다.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인증받는 흔한 방법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인증 기법이 OTP(One-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기술이다. OTP 기술은 사용자가 금융 거래 인증을 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OTP 발생기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증받는 방식이다.

OTP 기술은 크게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비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으로, 인증 서버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OTP 기술 도입 초기에 사용된 질의 응답 방식은 인증 서버가 임의의 6자리 수, 즉 질의값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그 수를 OTP 발생기에 입력하고, OTP 발생기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한다. 사용자는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고 인증 서버는 입력된 값을 확인한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질의값을 직접 입력해 응답값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



<초기 OTP 발생기>

이와 달리 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이 있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초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기초값이란 사용자의 신상 정보와 해당 금융 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한 값이며, 카운트값이란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이다.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이벤트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기초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된다. 이때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값을 증가시킨다. 인증 서버 역시 기초값과 카운트값으로 인증값을 생성하여 로그인 서버로 입력된 OTP 발생기의 비밀번호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 서버는 카운트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에 카운트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시간 동기화 방식은 현재 금융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초값과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 일방향 함수란 계산하는 것은 쉽지만 역연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로, 결과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입력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발급 시 동기화된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 을 구하고, r 에 대해 일방향 함수 f 를 n 번 수행하여 X_n 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X_n 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로그인 서버는 입력된 X_n 을 일방향 함수 f 로 한 번 더 계산해 X_{n+1} 을 구하고 이 값을 인증 서버로 전달하게 된다. 인증 서버 역시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 을 구하고, r 에 대해 일방향 함수 f 를 $n+1$ 번 수행하여 X_{n+1} 을 생성한 후 로그인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값과 비교하여 인증을 하게 된다.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에는 인증 서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전자시계가 장착되어 있어 시간 동기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 서버와 OTP 발생기 간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한다. 또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도 제약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 동기화: 서로 일관성 있게 같은 값을 유지하는 것. 같은 시점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

일방향 함수의 ㉠과 같은 특성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도 뒤에도 이유라 할 만한 게 없다. 그렇다면 이 OTP(일회용 비밀번호) 기술의 개발 이유를 1문단에서 찾아보자.

인터넷 बैं킹이나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인증은 필수적이다.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인증받는 흔한 방법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인증 기법이 OTP(One-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기술이다. OTP 기술은 사용자가 금융 거래 인증을 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OTP 발생기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증받는 방식이다.

(중략)

시간 동기화 방식은 현재 금융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춑값과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 일방향 함수란 계산하기는 쉽지만 역연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로, 결과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입력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두등~ 정답은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의 도입 목적이나 개발의 목적은 1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이유 추리 문제'를 풀 때는 앞뒤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묻겠다고 하는 경우(1단계와 2단계 해당), 문단의 내용을 묻는 경우(3단계-(1)), 글 전체의 내용과 구조를 묻는 경우(3단계-(2), (3)) 모두 '글의 구조'를 단계별로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먼저 지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차시 수업은 지문의 구조를 묻는 '전개방식 문제'이다.

이어질 내용을 스포하자면,

'이유 추리' 문제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 1.원인 추리 -> ㉠ 앞뒤에 답이 있다
- 2.목적 추리 -> 글 앞부분(주로 1문단)에 제시한 '목적'(~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려고, ~하기 위한 것)에 답이 있다.
- 3.전제 추리 -> ㉠ 문장 내용을 (조건, 가정, 이유, 근거) + (결론, 주장)으로 나눈 후, 앞엿것 반대, 뒤엿것 반대
- 4.기능 추리 -> 글 앞부분에 제시된 '정의'에 답이 있다. '정의'할 때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제시함.
- 5.조건 추리 -> ㉠이 들어 있는 해당 문단의 첫 문장에 제시된 조건 속에서 생각하기.

이때, '발문'이나 '㉠'에 제시된 내용('취지에 비추어'<- 이런 거)을 따라가며 풀다는 것을 기억할 것!

(4) ㉠ 자체에서 말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그 이유를 찾는다!(목적 추리, 조건 추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년 9월)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frac{1}{2}$ 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 등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조건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가정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여시 상속받을 수 있었을 가정 이익의 $\frac{1}{2}$ 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가정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유류분 제도의 취지, 목적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 목적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 조건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에서 말하는 '조건'을 앞선 내용에서 찾아야 한다. 먼저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라고 했으니 유류분의 취지를 찾자. 취지와 같은 말은 '목적'이다. '목적'은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하려고, ~하고자'의 형태로 쓰인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유류분은 2문단 끝에 있는 취지인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제 추리’ 문제 풀이(추론의 탈을 쓴 일치형 문제) 공식

‘추리 문제’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오해!!!

‘추리’는 써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써 있지 않은 내용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배우는데, 이것이 큰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추리한 것은 해당 지문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리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일치 문제’에 가깝다.

전제 추리 문제는 대부분 <문장 수준>에서 묻는다. 이런 경우, ‘㉠밑줄 친’ 부분을 읽자마자 풀어도 된다.

X가 아니면 Y가 아니었을 것이다.(전제) 그런데 ㉠ X이므로 Y이다.(결론)

- 그는 파티에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 (결론)
- 그가 파티에 가지 않았다면 사고로 죽지 않았을 것이다. (생략된 전제)

여기에서 ‘전제’는 조건, 가정, 이유, 근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사고’는 이 명제가 있게 된 배경이므로 전제에서든 결론에서든 바뀌는 것이 없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7학년도 6월)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選好)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도덕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으로 공평성(impartiality)을 제시한다. 공평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해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특정 개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상대가 가족인 경우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중요성이 매우 강하다. 가족 관계라 하여 상대에게 특별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철수는 근무 중 본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동해안 어떤 항구에서 혐의자 한 명이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한다는 첩보가 있으니 그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철수가 잠복 끝에 혐의자를 체포했더니, 그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었다. 철수는 고민 끝에 형을 놓아주고 본부에는 혐의자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민수는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한 명은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상 알게 된 영수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보다 적은 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민수는 노력한 끝에 오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둘 중 한명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삼촌의 빚을 갚았다.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평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민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다. 민수가 공평주의자라면 삼촌과 영수의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삼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수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삼촌과 영수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누구의 빚을 갚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지가 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의 추론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는?

- ① 철수가 형을 놓아주었다면 그는 누구라도 놓아줄 수 있을 것이다.
- ②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 ③ 철수가 놓아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④ 철수가 공평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철수가 형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비인간적인 사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형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 놓아주었으므로

생략된 전제는 ㉠의 앞엿것 반대, 뒤엿것 반대

형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X) --> 놓아 줌(X)

형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지 못했다면,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형인데 알아보지 못했다면)

잘했어요~ 그런데 선택지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없다 ㅜ.ㅜ

형의자가 자신의 형(X)임을 알고 --> 놓아 줌(X)

형의자가 자신의 형이 아니었다면,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답은 2번.

그렇다면 왜 '알다'를 부정하면 답이 안 됐고, '형'을 부정해야 답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20학년도 수능 독서 '가능세계' 지문에 있다. 형인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출생의 비밀을 다루는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보다 (자기 형이 아닌 경우가)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학년도 대수능)

정부가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 ①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생략된 전제는 ㉠의 앞엿것 반대, 뒤엿것 반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 (정부가) 투자하라.

(정부가)라는 주어가 맨 앞으로 자리 이동을 했다.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문장성분들의 자리를 이동시켜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평가원의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안 비밀!

Tip 자주 나오는 경제 개념 '할인율' 알고 가자!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주는 이자는 많은 게 좋아. 근데 역으로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적은 게 좋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 받는 게 아니라 역으로 대출을 한 후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낮은 게 좋아.

지문에서의 '할인'은 '내가' (미래의) '대상'의 흠을 잡아 그것의 현재 가치를 깎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할인율이 크면 대상의 가치는 적게 남아 있는 것이고, 할인율이 작으면 대상의 가치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속리 문제는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의 문제를 묻기도 한다. 연역추리나 귀납추리는 대표적인 '논리 속리' 문제이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학년도 대수능)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 평균 정보량 :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4. 밑글의 '부호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선 부호화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 ②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 ③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로 전송하기 전에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 선 부호화한다.
- ④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부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면 부호율은 1보다 커진다.
- ⑤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

공통 고리인 ‘발생 확률’의 화살표 방향도 같으니까 마음 편히 지운 후, (정보량과) (비트 수)의 관계가 비례 관계임을 확정! 그런데

②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⑤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

이유 추리 문제 적용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년 9월 시행)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하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다.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1. ㉠의 이유로 기정 적절한 것은? 2

- ①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기 때문이다.
- ②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에 중복 저장되기 때문이다.
- ③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 ④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⑤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던 친구들은 좀 쉽게 풀었을 문제인데, 우리는 모든 영역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것을 전제 하고 지문에 존재하는 내용만을 근거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첫문장에 '정의'했다.

그리고 승인과정 즉 합의 알고리즘(예시로 '작업 증명')을 통해 연결 여부를 결정한다. 그 후 1문단 첫 문장에서 정의한 대로 여러 노드(=컴퓨터)들에 저장한다. <-- 이것은 앞부분의 내용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결한 내용이다.

바로 앞부분 내용만으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1문단으로 돌아가 해당 기술의 '개념 정의'나 '목적'을 찾아본다. '정의'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포함한다. 이를 '기능 추리'로 분류한다. 기술 영역에서처럼 '기능'을 묻는 문제는 글 앞부분에 있었을,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었을, '정의'에서 찾는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학년도 11월)

A 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악기를 구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이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약칭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은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안전한 구매를 위해 A 씨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보호 장치를 잘 이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청약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신원 정보 확인이란 판매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확인 은 소비자의 계약 체결 의사인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금 결제 전 특정 팝업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팝업창을 통해 소비자의 컴퓨터 조작 실수나 주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에스스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 에스스로란 주어, 개념 (소비자가 지불한 물품 대금을) 대상 (은행 등 제3자에게 맡겼다가) 주체, 대상 (물품이 소비자에게 배송 완료된 후) 시간 (구매 승인을 하면) 조건 은행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거래 안전장치로) 결제 대금 예치제라고도 하며, 소비자는 에스스로 가입 여부를 쇼핑몰 초기 화면이나 결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씨의 경우, 에스스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악기를 구입하면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다. 현재 선불식 현금 거래에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에스스로에 가입해야 한다. 단,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며, 음원처럼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 제품 배송 여부를 에스스로를 통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장치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제품 구매 후 소비자 보호 장치로는 청약철회가 있다. 만약 A 씨가 악기를 배송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품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통상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하지만 A 씨처럼 단순 변심일 경우 반송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제품이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A 씨가 제품을 훼손했다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송비도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 및 철회에 관한 기록들은 5년 동안 보존되므로 분쟁이 생겼을 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이 소비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제품이 훼손되었거나, 시간 경과나 사용으로 인해 제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서적 등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이는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 판매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①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상 바꾸기

판매자에게는 대금이 입금도지도 않았다. 판매자 개역울 T.T

구매자가 승인 안 하면, 판매자에게 입금 안 되도록 하는 게 '에스스로'이다.

통통 '정의'는 그 피정의항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나 기능에 맞추어서 한다. 그러므로 ㉠을 정의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소비자 - 은행 등 제3자 - 판매자

라는 이 세 주체의 관계를 생각해서 읽어야 한다.

③ 판매자가 소비자의 구매 승인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④ 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소비자가 물품을 직접 확인한 후) 구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O <-- '에스스로' 정의에 의해서

에스스로 사용하면,

구매자		은행 등 제3자		판매자
마음에 들면	구매 승인 ->	대금	입금->	수령
안 들면	<- 안 승인			고갱님, 납배바 T.T
교환 요구해도				네 고갱님~
	구매 승인 ->	대금	입금->	

이게 된다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년 9월 시행)

(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뒤에 나오는 '심리'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동일시는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다.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 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앤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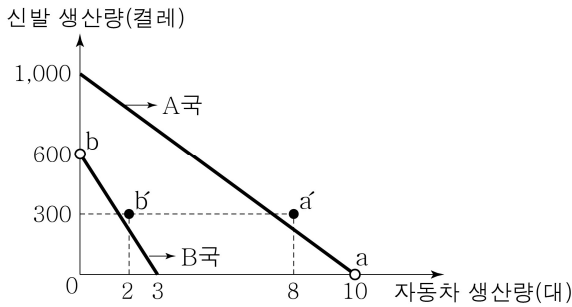
3.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 ① 관객은 영화 장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② 현실의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답이 나온다
- ③ 영화가 현실을 불연속적으로 파편화하여 드러내기 때문이다.
- ④ 관객은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⑤ 관객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배제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7년 3월 시행)

두 나라가 자발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무역 당사국이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다면, 이 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무역에서 수출입 재화는 각각 어떻게 결정될까?

A국과 B국에서 자동차와 신발을 생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아래 <그림>과 같이 A국은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하여 최대 자동차 10대 혹은 신발 1,000켤레를 만들 수 있다. 한편, B국에서는 동일한 조건하에 자동차 3대 또는 신발 600켤레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림>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

이때 국가 간 비교 우위 산업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비교 우위란 어떤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기회비용이란 그 재화 생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가치를 말한다. 위의 상황에서 A국이 자동차를 1대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발 생산을 100켤레 줄여야 한다. 즉, A국 입장에서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신발 100켤레와 같다. 한편, B국은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이 신발 200켤레가 된다. 이 경우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의 그것보다 작으므로, A국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반면, ㉠ B국은 신발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A국이 자동차를 특화해 B국에 수출하고, B국은 신발을 특화해 A국에 수출하면 무역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위 <그림>에서 A국이 자동차만 10대 생산(a)하고 B국이 신발만 600켤레를 생산(b)해서 양국이 무역을 한다고 하자. 이때 A국이 자동차 2대를 수출하고 그 대신 B국으로부터 신발 300켤레를 수입한다면, A국은 자동차 8대와 신발 300켤레의 조합(a')을, B국은 자동차 2대와 신발 300켤레의 조합(b')을 소비할 수 있다. 즉 무역을 통해 양국은 무역 이전에는 생산할 수 없었던 재화량의 조합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어 무역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20세기 초의 경제학자 헉서는 국가 간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비교 우위를 낳는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각국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즉 재화마다 각 생산요소들이 투입되는 비율이 다르기 마련인데, 어떤 재화 생산에 특정 생산요소가 집약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생산요소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해당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자동차·선박 등 자본 집약재의 수출국이고 신발·의류 등 노동 집약재의 수입국이라면, 그 국가는 타국에 비해 자본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노동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은 국가 간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변화함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경공업 위주의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 최근의 지식 집약적인 IT 산업까지 주요 산업 및 수출품이 변화해 왔다. 이는 경제 성장에 따라 각 생산요소들의 부존 비율이 변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 산업이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 생산 가능 곡선: 한 경제의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 선.

* 생산요소: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자본 등의 투입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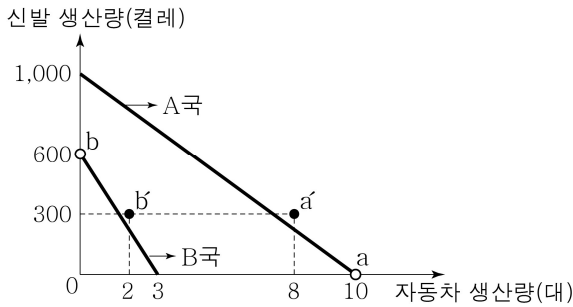
* 생산요소 부존량: 한 경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생산요소의 양.

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 ①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자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②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기 때문이다.
- ③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기 때문이다.
- ④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했을 때, B국이 A국보다 신발 생산량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 ⑤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했을 때, B국의 자동차 생산량보다 신발 생산량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나라가 자발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무역 당사국이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다면, 이 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무역에서 수출입 재화는 각각 어떻게 결정될까?



<그림: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

A국과 B국에서 자동차와 신발을 생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아래 <그림>과 같이 A국은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하여 최대 자동차 10대 혹은 신발 1,000켈레를 만들 수 있다. 한편, B국에서는 동일한 조건하에 자동차 3대 또는 신발 600켈레를 생산할 수 있다.

이때 국가 간 비교 우위 산업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비교 우위란 어떤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기회비용이란 그 재화 생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가치를 말한다. 위의 상황에서 A국이 자동차를 1대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발 생산을 100켈레 줄여야 한다. 즉, A국 입장에서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신발 100켈레와 같다. 한편, B국은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이 신발 200켈레가 된다. 이 경우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의 그것보다 작으므로, A국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반면, ㉠ B국은 신발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 **대응**시켜 보자.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의 그것보다 작으므로, A국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 ㉠ B국은 신발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안에 들어갈 것은

②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기 때문이다.

(기회 비용이) 작은 것이 (비교)했을 때 우위라는 얘기.

여기에서는 문장 뒷부분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를 앞 문장과 일치하는 '기준'으로 잡고 앞부분을 대응시켰다.

이 '기준 잡고 대응'은 출글 <보기>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수능국어 1번~45번을 꿰뚫는 단 하나의 원리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준 잡고 대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7학년도 대수능)

1894년, 화성에 고도로 진화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화성의 지도들에 나타난, ‘운하’라고 불리던 복잡하게 얽힌 선들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화성의 ‘운하’는 1878년에 처음 보고된 뒤 거의 30년간 여러 화성 지도에 계속해서 나타났다. (존재하지도 않는 화성의 ‘운하’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19세기 후반에 망원경 관측을 바탕으로 한 화성의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특히 1877년 9월은 지구가 화성과 태양에 동시에 가까워지는 시기여서 화성의 표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보였다. 영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그린은 대기가 청명한 포르투갈의 마테이라 섬으로 가서 13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해서 화성을 보이는 대로 직접 스케치했다. 그린은 화성 관측 경험이 많았으므로 이전부터 이루어진 자신의 관측 결과를 참고하고, 다른 천문학자들의 관측 결과까지 반영하여 당시로서는 가장 정교한 화성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스키아파렐리의 화성 지도가 나오면서 이 지도의 정확성이 도전받았다. 그린과 같은 시기에 수행한 관측을 토대로 제작한 스키아파렐리의 지도에는, 그린의 지도에서 흐릿하게 표현된 지역에 평행한 선들이 그물 모양으로 교차하는 지형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키아파렐리는 이것을 ‘카날리(canali)’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해협’이나 ‘운하’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였다.

㉠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그린의 스키아파렐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우선 스키아파렐리는 전문 천문학자였지만 화성 관측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그는 마테이라 섬보다 대기의 청명도가 떨어지는 자신의 천문대에서 관측을 했고, 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8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짧은 시간에 특징만을 스케치하고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 그것을 정교화했으며, 자신만의 관측을 토대로 지도를 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승리는 스키아파렐리에게 돌아갔다. 그가 천문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천문학자였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천문학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형을 지도에 그려 넣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스키아파렐리의 지도는 지리학의 채색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린의 지도보다 호소력이 강했다. 그 후 스키아파렐리가 몇 번 더 ‘운하’의 관측을 보고하자 다른 천문학자들도 ‘운하’의 존재를 보고하기 시작했고, 이후 더 많은 ‘운하’들이 화성 지도에 나타나게 되었다.

일단 권위자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알려지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관측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척도로 망원경의 성능보다 다른 조건들이 더 중시되던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수정되기 어려웠다. 성능이 더 좋아진 대형 망원경으로는 종종 ‘운하’가 보이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운하’ 가설 옹호자들은 이것에 대해 대형 망원경이 높은 배율 때문에 어떤 대기 상태에서는 오히려 왜곡이 심해서 소형 망원경보다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해명’하곤 했던 것이다.

8. ㉠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 ① 보이는 대로 직접 그림
- ② 지리학의 방식대로 채색함
- ③ 더 높은 배율의 망원경을 사용함
- ④ 다른 관측자의 관측 결과를 반영함
- ⑤ 관측 조건이 더 양호한 곳에서 관측함

발문을 보자.

8. ㉠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에서 ㉠의 위치를 찾아보자.

㉠은 해당 문단의 중심 문장이다. 그러므로 ㉠의 근거는 해당 문단에 있다.

(㉠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따라서 이 문단은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임 (그린이) > (스키아파렐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우선 스키아파렐리는) 주어가 그린일 될 줄 알았는데, 스키아파렐리가 주어로 나왔다. 그렇다면 이하 진실은 스키아파렐리가 그린보다 못한 점이 진실될 것이다. 전문 천문학자였지만 화성 관측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그는 마테이라 섬보다 대기의 청명도가 떨어지는 자신의 천문대에서 관측을 했고, 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8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짧은 시간에 특징만을 스케치하고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 그것을 정교화했으며, 자신만의 관측을 토대로 지도를 제작 화성 관측은 처음이라며? 근자감 째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음 선택지들의 진실이 참 묘하게 머리에 잘 안 들어 온다. '주체를 확장해야 한다. 이 발문은 ㉠과의 연관성으로 볼 때, '그린을 우위에 있다고 칭찬한 근거가 아닌 것은?'과 동일한 의미이다. ㉠에 따라, 다음 선택지 서술의 주어를 '그린'으로 바꾸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8. ㉠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린은) 보이는 대로 직접 그림
- ② (그린은) 지리학의 방식대로 채색함
- ③ (그린은) 더 높은 배율의 망원경을 사용함
- ④ (그린은) 다른 관측자의 관측 결과를 반영함
- ⑤ (그린은) 관측 조건이 더 양호한 곳에서 관측함

그런데 처음부터 읽어 온 친구라면 2문단의 '그린은' 어땠는지가 떠오를 것이다.

'근거'는 해당 문단에 있다! 이를 '근거 축리'로 분류한다.

19세기 후반에 망원경 관측을 바탕으로 한 화성의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특히 1877년 9월은 지구가 화성과 태양에 동시에 가까워지는 시기여서 화성의 표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보였다. (영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그린은) 대기가 청명한 포르투갈의 마테이라 섬으로 가서 13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해서 화성을 보이는 대로 직접 스케치했다. 그린은 화성 관측 경험이 많았으므로 이전부터 이루어진 자신의 관측 결과를 참고하고, 다른 천문학자들의 관측 결과까지 반영하여 당시로서는 가장 정교한 화성 지도를 제작하였다. 오~ 그린 훌륭하네~

2문단과의 대응은 수학으로 치면 간단한 거임. 답은 2번.

전체 주제를 영두에 두고(문단 끝) + ㉠해당 문단 + 앞서 있는, 대응되는 문단(2문단)을 찾았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학년도 6월)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5

< 보 기 >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화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거시경제 문제에서 논의 전개 기준이자 시작점은 '통화량'이다. (기억해 둘 것!)

중앙은행(=우리나라로 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두 번째 수단이 시중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다.

채권을 팔면 현금만 중앙은행으로 들어가 시중의 **통화량은 축소**되고,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현금만 시중으로 풀려서 시중의 통화량은 확대된다.

통화량이 확대되면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뭐든지 많고 흔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법)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말린 화폐에 대한 보상인 이자율이 떨어지고, 재화의 가격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다시 통화량 축소**가 필요하다. 중앙은행은 이를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금리가 높으면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간다), 채권을 팔기 시작한다.(=시중의 통화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거시경제 지문을 풀기 위한 배경지식은) (기본 개념을 다룬 기출문제들을) 기본 개념을 다룬 지문부터 순서대로 정확하게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통화량 지문(본원통화와 M2, 17년 4월) -> 금리와 인플레이션 관계 지문(17년 6월) -> 환율 지문(18년 수능, 오버슈팅) -> 환율과 수출 관계 지문(22년 수능, 브레튼우즈 체제)을 순서대로 풀면 이전 지문에 대한 이해가 다음 지문을 풀기 위한 배경지식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독서 영역별 기출』 '경제' 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경기 변동에 따른 기본적인 통화 정책(통화정책의 주체는 중앙은행이고 재정 정책의 주체는 정부인데, 이것 역시 해당 기출문제를 다룰 때 이야기하기로 하자. '시장 금리'와 '정책 금리'는 그 '주체'나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그 용어를 둘러싸고 다루어지는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역시 그때 얘기하기로 하자.) 사이클을 이해하기로 하자.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학년도 6월)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이자율)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화폐가치가 하락해서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엄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묻고 있는가? <보기>와 선택지를 통해서 기준 금리와 물가 인상률과의 관계를 묻고 있다.(둘 간의 관계를 묻는 '양자 관계' 문제)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지문에서 뭐라고 했는지 찾아보러 가자. 1문단에서 반비례 관계인 거 확인.

<보기>의 마지막 조건에서 정책 외부 시차가 1개 분기인 것만 한 번 더 고려해주면 됨.

< 보 기 >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음... 금리 (=이자율)와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보아야 하겠군! 1문단을 참고할 때, 반비례하!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참고로 경제지표는 일반적으로 분기별(3개월 단위), 연도별로 그 상승과 하락을 살펴본다.) 여기까지는 '현황'과 '조건'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목표'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화면) 5.5%로 인상하거나 2.5%로 인하하거나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5.5%로 인상하면 이자율은 1%하락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면 물가상승률이 1%p만큼 떨어지어서 2%가 됨 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다음 분기에서도 예상치 3%에서 1%p만큼의 인하 효과 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2학년도 수능)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그럼 앞서의 ‘국제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는 얘기는 달러화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네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어쩌라구? 미국 적자부채? 말아?(여기까지에서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아 그래서 트리핀 교수의 딜레마~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앞 문단 내용 반복 및 요약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작업. ‘금’은 (앞선 내용에 따르면) 제한적 재화로서 전 세계가 믿는 자산이니 여기에 달러 가치를 고정시켰다, 그리고 얼마든지 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전 세계를 설득한 것.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뿐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 ㉠방법 실패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 자국 통화 평가절상하면 적자된다는 거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 미국 뜻대로 될 거란 전망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 평가절상 될 거니까 지금 사두자!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돈 가치가 오니까 더 평가절상, 환율은 더 하락. 마르크화, 엔화 난리 났네.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약달러 될 레니가 빨리 금으로 바꿔줘~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27H국-환율의 가짓수 17H, 37H국-37H, 47H국-67H...(점을 찍어서 연결해 보자.)

3문단으로부터

환율 하락 = 평가 절상 = 수출에 불리

이제 <보기>를 통해

18.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 재정 적자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사실 A국의 무역적자 상황을 제시해 줘야 지문과의 관련성 속에서 풀 수 있음. 자국 재정 적자 문제를 왜 타국에 전가하나. 내용 이해를 위한 배경지식을 너무 필요로 하는 문제라서 문제가 있음. 이걸 반박이지.

지문의 마지막 문단도 그렇고 이 문제는 해야 할 말에 비해 지문이 짧아서 필자가 할 말을 다 못하고 끔찍대는 괴로움 그 잡채!

A국 미국이네

B국 역지로 환율 50% 하락시킴 = 50% 평가절상 = 수출에 50%만큼 불리 일본인가?

C국 역지로 환율 30% 하락시킴 = 30% 평가절상 = 수출에 30%만큼 불리

플라자합의(1985) 2년 경과 후 실제로 달러화는 30%까지 평가절하 되었고(=환율 상승) 미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게 되었다. 반면 일본에 게는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이 됨. 역플라자합의(1995)를 통해 다시 엔화의 환율을 상승시켰으나 지금까지 일본 경제는 고전 중. 이런 배경지식은 몰라도 풀이에 지장 없음.

삼자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네.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X 그런 소리 없음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 /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 /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하락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하락과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B국 통화에 대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C국 통화의 환율은 = 상승 모두 하락했겠군. X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 /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③번에서 설명한 대로 B국에 대하여 C국은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에 유리 -> 경상 수지 개선

A국에 대하여 B국 환율 50% 하락, C국 환율 30% 하락하면

환율이 높은 게 수출에 유리하니까

B국보다 환율이 덜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높은 C국이 수출에 유리->경상수지 개선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 금리가 높아서 강달러니까 수출에 불리 ->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 /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단순 불일치

정리하자면

‘이유 추리’ 문제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 1.원인 추리 -> ㉠ 앞뒤에 답이 있다
- 2.목적 추리 -> 글 앞부분(주로 1문단)에 제시한 ‘목적’(~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려고, ~하기 위한 것)에 답이 있다.
- 3.전제 추리 -> ㉠ 문장 내용을 (조건, 가정, 이유, 근거) + (결론, 주장)으로 나눈 후, 앞엿것 반대, 뒤엿것 반대
- 4.기능 추리 -> 글 앞부분에 제시된 ‘정의’에 답이 있다. ‘정의’할 때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제시함.
- 5.조건 추리 -> ㉠이 들어 있는 해당 문단의 첫 문장에 제시된 조건 속에서 생각하기.

이때, ‘발문’이나 ‘㉠’에 제시된 내용(‘취지에 비추어’<- 이런 거)을 따라가며 푼다는 것을 기억할 것!

꿀 Tip

읽어도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문장 : 서술어까지 읽고 앞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주어를 다시 확인하라. 주어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주어에 괄호도 치자), 서술어와 연결되면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한번 해보시라. 효과가 탁월하다.

문단 :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찾기, 주로 1문단에, 주로 주어에, 앞 문단의 개념과 비교하고, 대응시키며 읽기. 두 개의 개념을 각각의 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면 ‘차이점’에 주목해서 읽기!

전체 주제 : 1문단(특히 끝부분)과 끝문단을 연결해 보자. 그게 주제다. 이 주제를 잡고 있어야 여러 유형의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다.